



지난달 26일 청운관에서 '한국을 구해라! 인구 위기, 발상의 전환'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사진=조병연 기자)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 저출산 해결의 핵심”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경희 도전 콘퍼런스, 한국을 구해라! 인구 위기, 발상의 전환

지난해 한국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한국은 6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못 되는 ‘출산율 꼴찌’ 국가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학교 정경대학은 인구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달 26일 청운관에서 열린 콘퍼런스 ‘한국을 구해라! 인구 위기, 발상의 전환’에서 어떤 제언과 대담이 오갔는지 알아봤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정책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중백(사회학)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기를 낳는 것보다는 안 낳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획기적이거나 용기와 결단이 있는 정책이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년의 생각과 행동을 ‘경험’, ‘절박’, ‘무력’으로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다양함과 경험을 추구한다”며 한 사례로 기존의 백화점 문법을 깨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 ‘더현대’의 흥행 요인을 언급했다. 이어 수능에서 재수, 삼수, 심지어 사수를 감행하며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을 사례로 들며 이는 청년이 단순한 욕심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절박성’의 표현임을 설명했다. 또 “희망과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니트족(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청년 세대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세대가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수도권에 직주근접(직업과 주거가 가깝다는 의미) 양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인구변화를 경제적 측면에서 진단했다. 정 원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경제 성장 동력이 식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고령화 문제와 인구가 줄어들어 기업가가 활동할 기회가 많이 줄어든 시장에서 창의적이고 과

감한 도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혁신성장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와 국가 차원에서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증권이라든가 R&D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채택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장년 청년의 경제 활동률을 높일 수 있어야”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인구변화와 노동시장에 가져다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장래에 제일 많이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며 “산업 간, 직종 간 불균형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숙박업과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이 교수는 “수도권에 정보통신업 분야가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노동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인력이 줄어드는 것 자체를 이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장년 청년의 경제 활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노동인력 줄어드는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출 수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을 높이면 사람 수가 줄어도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 가구 지원 더 많이 해야”

김태훈(경제학) 교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복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이나 기타 노인복지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그 재원을 아동수당이나 출산 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제도를 “출산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좋은 사회 실험”이라고 평하며 대표 예시로 들었다.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제도는 강원도가 2019년부터 출산 가구에게 월 40만 원의 아동수당을 4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는 “육아 기본 수당이 시행되기 전에는 두 지역의 강원도와 다른 지역들의 출산율 변화 패턴이 굉장히 비슷했다”면서 “육아 기본 수당이 시행된 이후에 강원도의 출산율 이탈률이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지의 핵심은 강원도가 제일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출산 가구의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화상으로 참여한 미국인구학회 회장 제니퍼 글래스 텍사스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으며, 가족 친화적인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니퍼 교수는 선진국은 대체로 인적 자원에 투자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자녀 교육 부담이 크고, 이것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니퍼 교수는 ‘출산의 기회 비용’을 언급하며 “자녀를 갖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금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보면 한국에선 엄마들이 주된 기회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의 엄마들은 자녀를 갖기 위해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없게 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직된 노동 분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자녀 양육의 혜택은 정부와 기업이 가져가지만 부모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현 구조를 지적하며 “부모들은 자녀에게 투자한 자원을 직접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니퍼 교수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적절히 이뤄진 대표적 국가로 프랑스를 예로 들며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정교한 일·가족 지원 시스템을 통해 부모 모두 자녀가 어릴 때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며 “중산층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번다”고 했다.

이외에도 ▲유급 출산 휴가 및 높은 임금 보상 ▲고품질, 저비용, 접근 가능한 보육 시스템 ▲근무 시간 규제 ▲세제 혜택을 통한 부모에 대한 소득 지원 등이 한국의 출산율을 제고할 제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무료 고등 교육과 대학 교육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저비용의 학사 학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노동력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것”

강연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한 청중은 출산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철희 교수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노동력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금성 지원의 타당 여부를 논하는 과정에서 김태훈 교수는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부터 시작된 5000만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이 도입된 후 출산율이 0.86명에서 1.3명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금 지원이 지역 소멸을 막고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저출산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의 속담)에 비유하며, 단순한 해법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위한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